

UN 2030 'SDGs'의 의의와 이행방안 및 당면과제  
'SDGs 이행대책 관민협의기구' 설치를 건의함

<UN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SDGs) 대응방안 대(對)정부 보고문>  
2016년 7월 6일(수)

UN 한국SDSN<sup>1)</sup>



- 목 차 -

1. 정부의 SDGs 이행 대책 수립 착수의 지연 - 그 경위
2. UN 17 SDGs 구성
3. SDGs의 목적: 각국의 국가경영방식 변환
4. 17 SDGs의 특징과 운용 원칙
5. OECD국들의 '지속가능발전' 수준: 예시적 평가
6. 웰빙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발전 현황
7. 국민의 '행복감'으로 본 한국의 발전 현황
8. 한국의 중장기적 주요 발전 위협요인
9. 문제에 대한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 SDGs는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
10. SDGs의 활용방안
11. SDGs 이행을 위한 과제: 모니터링 과정의 설정
12. SDGs 이행을 위한 과제: '지속가능발전전략'의 정립, 운영
1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적 협치의 필요성

- 1) **UN SDSN(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목적: 글로벌 차원에서 자연·사회과학 전문가들을 동원해 UN SDGs의 개발 및 이행 등 지속가능발전 문제들의 실질적 해결방안을 연구해 UN 및 각국 정부에 제시하면서 SDGs 이행을 지원하고 SDGs의 중요성을 공론화하고 청소년 SDGs 교육을 추진. **발족:** 2012년 8월 UN 반기문 사무총장이 발족시킴. **대표(Director):** 사무총장특별고문 Jeffrey Sachs Columbia대 교수. **사무국:** Columbia대 The Earth Institute. **회원기관:** 대학교, 연구기관, 기업체, 재단, 시민사회 조직 등 지속가능발전 관련 전문성을 갖추고 그 해법의 모색 및 이행에 상당한 역량을 투입할 용의가 있는 지식기관들. **글로벌하게 국가별 조직(National Network)** 및 주요 지역별 네트워크로 구성. **국제전략이사회(Leadership Council):** 지속가능발전 문제 전문가 약 100인으로 구성. **UN 한국SDSN 발족:** 2013년 10월 14일 임의기구로 발족. **대표:** 양수길 UN SDSN 국제전략이사 겸 전(前)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2010~2012). **고위원탁회의:** 고위자문회의와 연구협의회의로 구성. **고위자문회의 의장:** 이흥구 전 국무총리. **연구협의회의 회장:** 대표. **본부:** 고려대 오정예코리질리언스연구원(OJERI) **본부장:** 김정규 OJERI원장. **홈페이지:** [www.unsdsn.org](http://www.unsdsn.org). 본 보고문은 이흥구 고위원탁회의 의장, 양수길 대표 및 김정규 본부장이 고위원탁회의를 대표해 책임 집필하였으며 지난 6월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UN 2030의 국가협치에 대한 의의와 대응과제" 토론회 내용에 기반하고 있음.

## 1. 정부의 SDGs 이행 대책 수립 착수의 지연 - 그 경위

UN은 경제사회협력개발기구(ECOSOC) 주관 연례적 고위정치포럼(HLPF)에서는 오는 7월 11~20일에 각국의 2030 이행 준비 현황을 청취, 평가 위한 제1차 회의를 개최. 정부는 동 회의에 SDGs 이행 자발적 보고 22개국의 하나로 참석해 우리나라의 SDGs 이행 준비 현황을 보고할 예정.

그러나 국내적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SDGs의 이행 대책 수립에 대한 책임소재가 법적으로 애매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대책의 검토가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원래 지속가능발전기본법(2007.8.3. 제정, 2008. 2.4 시행)이 1992년 리우 환경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의제 21’ 및 2002년 요하네스버그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년을 단위로 하는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 추진(5년 마다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도록 대통령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
- 이후 정부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2010. 1.13 제정, 2010.4.14. 시행)을 도입해 정부가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관련된 사항의 심의를 위해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두도록 규정. 동 기본법(제49~50조)에 의해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대신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되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지속가능발전법(2010. 1.13 타법개정, 2010. 4.14 시행)으로 개정하면서 동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심의를 위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이관.
- 이어 정부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2013. 3.23 개정)을 개정하여 녹색성장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
- 녹색성장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구성되는 현 법령체계에 의해 국무총리실은 녹색성장 관련 업무 추진을 관장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는 환경부가 주관.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은 녹색성장 5개년계획(제2차 계획: 2014~2018)을 수립, 총괄하고 환경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제3차 계획: 2016~2035)을 수립, 총괄하고 있음.
- 그런데 새로운 SDGs가 추구하는 2030 의제는 현(現)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 동 기본계획이 추구하는 기존의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능가하는 차원의 국가발전 패러다임 변환 의제로써 환경부가 관장하기에는 역부족이고 당연히 국무조정실이 관장해야 할 의제. 그러나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적 사각지대에 방치된 상태임. 이에 따라 정부 내에서 SDGs의 이행 대책 수립 착수가 아직까지 지체되고 있음.

SDGs의 이행을 위해서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및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구성되는 현 유관 법령체계의 개편이 요구됨. 그러나 새로운 법령체계에 담을 SDGs 이행방안의 연구, 공론화를 위해 우선 ‘SDGs 이행 대책 관민협의기구’ 설치 필요.

새로운 법령체계에 SDGs 이행 대책을 담기 위해서는 동 대책을 연구, 공론화하는 작업이 선

행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적어도 1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될 것임. 따라서 법령 개편에 앞서 향후 1년 간 SDGs 이행 대책을 연구, 공론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SDGs 이행 대책 국민 협의기구'를 설치 운영하되 그 추진책임을 국무조정실이 맡아야 할 것임.

## 2. UN 17 SDGs 구성<sup>2)</sup>

- SDG 1 (5+2 세부목표). 세계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을 근절하자.
- SDG 2 (5+3 세부목표). 굶주림을 근절하고 **식량을 확보**하고 영양을 개선하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촉진하자.
- SDG 3 (9+4 세부목표). 모든 연령과 모든 이를 위해 **건강한 삶**을 확보하고 **웰빙**을 촉진하자.
- SDG 4 (7+3 세부목표). 포용적이고 형평에 맞는 **질적 교육**을 확보하고 모든 이를 위한 **평생학습**의 기회를 촉진하자.
- SDG 5 (6+3 세부목표). **남녀평등**을 실현하고 모든 여성과 소녀에게 **역량**을 부여하자.
- SDG 6 (6+2 세부목표). 모든 이에게 **물과 위생시설**의 공급과 지속가능한 관리를 확보하자.
- SDG 7 (3+2 세부목표). 누구에게나 저렴하고 믿을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가 공급될 수 있게 하자.
- SDG 8 (10+2 세부목표). 지속적이며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모든 이를 위해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괜찮은 **일자리**를 촉진하자.
- SDG 9 (5+3 세부목표). 복원력 있는 사회간접자본설비를 구축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촉진하고 **혁신**을 배양하자.
- SDG 10 (7+3 세부목표). 국내적 및 국제적 **불평등**을 줄이자.
- SDG 11 (7+3 세부목표).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복원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 정주지**를 구축하자.
- SDG 12 (8+3 세부목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방식을 확보하자.
- SDG 13 (3+2 세부목표). **기후변화**와 그 **충격**에 대해 시급히 행동을 취하자.
- SDG 14 (7+3 세부목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바다 및 해양자원**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자.
- SDG 15 (9+3 세부목표). **육상 생태계**의 보호, 복원과 지속가능한 활용을 촉진하고 **숲**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사막화**와 싸우고 **토지훼손**을 정지, 복원하며 **생물다양성 손실**을 중단시키다.
- SDG 16 (10+2 세부목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촉진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정의**를 실현하고 모든 **제도의** 각급에서의 **효과성과 책임성** 및 **포용성**을 구축하자.
- SDG 17 (19 세부목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이행수단**을 강화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활성화하자.

2) 각국의 대내적 세부목표 112, 대외적 개발지원의제 38개 및 국제협력의제 SDG #17의 19개로 구성. 세부목표 총 169개

### 3. SDGs의 목적: 각국의 국가경영방식 변환 - ‘지구경계’를 존중하며 국민의 웰빙을 추구

#### 1) SDGs의 배경: 현대 인류문명의 지속가능성 위기

빈곤개도국 중심의 세계인구 증가로 수십억의 빈곤인구가 상존. 무절제하고 이기적인 소비·생산 활동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며 사회적 약자를 소외시키며 각국의 경제활동과 그에 따른 각종 배출이 대기시스템과 자연생태계의 수용역량(‘지구경계’)을 초과(‘침범’).

- 지구온난화 등 지구환경 파괴로 미래세대의 생존 위협

기술발달과 지식경제화의 가속화 및 금융 글로벌화로 부와 소득의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사회의 양극화로 사회공동체가 위협받고 경제의 구조적 불안정성도 증대.

- 각국 사회적 정치적 불안의 확대, 경제성장기제의 약화, 청년실업의 구조화, 서민층의 분노, 한국의 ‘헬조선’ 정서, 미국의 Trump 현상, Brexit 등이 초래되고 있음.

그 결과 오늘날 인류문명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및 정치적 지속가능성 위기 조성.

#### 2) SDGs의 목적: 지속가능성 위기 해소 위해 글로벌 패러다임의 변환 추진

지속가능성 위기의 근저(根底)에 있는 각국의 경영체제와 글로벌 협력체제 상의 문제:

- 정치권과 정부의 ‘단기주의’ → 근시안적 국가경영
- 정부 부처 및 전문가 집단 간 칸막이(silos) 현상: 각 부문 문제들 간 상호 연결성을 도외시하는 정책 처방 → 특히 GDP/경제성장 우선주의로 인한 파행적 국가 발전궤도: 사회적, 환경적 문제의 누적과 위기의 빈발 → 경제성장 잠재력 약화
- 글로벌화 → 특정 국가 혹은 지역 문제의 국제적 확산
- 지구환경, 빈곤개도국(역량 부족), 지역갈등 등 글로벌 문제 협력체제의 미비 → ‘공유지(communs)의 비극’(집단행동의 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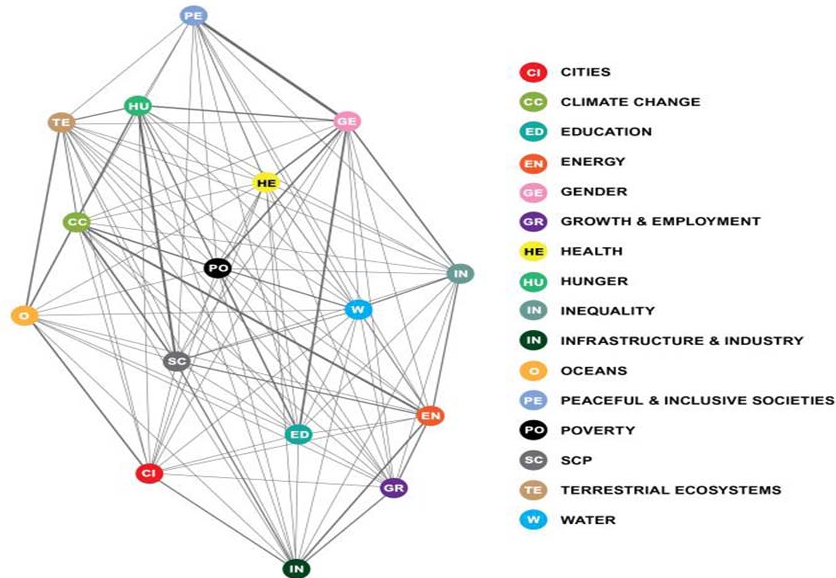
SDGs는 상기 문제들에 대한 대책. Rio+20(2012 UN정상회의, “The Future We Want”)을 기해 개발되기 시작: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으로의 변환 위한 국제협력 대책

### 4. 17 SDGs의 특징과 운용 원칙

#### 1) 경제, 사회, 환경 및 정치 등에 걸쳐 동시에 추구되어야 할 최소한의 발전 목표 세트.

- 17개 SDG는 상호불가분하게 통합된 종합목표: 동시적 상호 보완적으로 추구되어야.
- 세계적 패러다임 전환 위한 보편적(universal) 행동의제: 모든 나라가 이행 참여해야
- 최소 15년 이상의 미래를 생각하는 국가 경영 추구.
- 국가별 적용에는 각국 고유의 여건, 발전수준, 역량, 정책 및 우선순위를 감안해 적용.
- 선진국들은 개도국 발전 지원도 세부목표세트에 반영해 추구해야.

## 2) 17개 SDG는 상호 연결된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



출처: UN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15)

## 3) SDGs는 ‘인간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적, 세계적 행동의제

- 경제적 번영과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모두 추구하는 ‘좋은 사회’를 지향 → 인간의 행복을 증진.
- ‘발전(progress)’의 목표와 지표는 시민의 행복(well-being)의 증진.
- UN SDSN, ‘웰빙의 결정요인’에 대한 계량적 분석 결과: “국민의 웰빙 수준은 소득수준(개인당 GDP), 실업률(의 역수) 및 SDGs Index(경제, 사회 및 환경 모두를 포괄하는 종합적 목표치 달성 수준)에 의해 좌우된다.”
- EU의 경제사회협의회(EESC): “SDGs는 지구의 경계 내에서 ‘사회적 시장경제’(social market economy)를 실현하자는 것.”

## 4) 인간 존엄성의 존중 - “어느 누구도 낙오시키지 말자(Leave no one behind)”

- 모든 국가의 모든 구성원에 대해 SDGs를 적용, 실현해야.
- 인종, 성별, 연령대별, 지방별, 핸디캡 인구별 등 사회적 특징별로 대상을 세분, 적용해 대상별 목표 실현 추진.
- 가장 뒤에 처진 나라와 사람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목표의 실현 추구.

## 5. OECD국들의 ‘지속가능발전’ 수준: 예시적 평가

### 1) SDSN, “The SDG Index and Dashboard”(초고 2016.6.21.), Table 3.

	1 No Poverty	2 Zero Hunger	3 Good Health and Well-being	4 Quality Education	5 Gender Equality	6 Clean Water and Sanitation	7 Affordable and Clean Energy	8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9 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10 Reduced Inequalities	11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12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13 Climate Action	14 Life Below Water	15 Life on Land	16 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	17 Partnerships for the Goals
	SDG1	SDG2	SDG3	SDG4	SDG5	SDG6	SDG7	SDG8	SDG9	SDG10	SDG11	SDG12	SDG13	SDG14	SDG15	SDG16	SDG17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Chile																	
Czech Republic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srael																	
Italy																	
Japan																	
Korea, Rep.																	
Luxembourg																	
Mexico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Slovak Republic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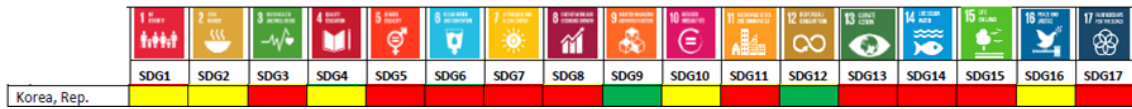
Source: Authors' calculations

주: ■ '불량', ■ '우량', ■ '취약'.

### 2) SDSN, “The SDG Index and Dashboard” - 시사점

- 어느 선진(OECD)국도 ‘지속가능발전’ 지수 상 17 SDGs 모두에 걸쳐 “우량”하지 않고 최소 4개에 걸쳐 “불량”한 상태임.
  - ▷ 스웨덴, 덴마크 및 노르웨이 등 스칸디나비아의 세 최우량국들도 100점 만점에 83~81점 수준.
  - ▷ 평균적으로 6개 정도의 SDG에 대해 “불량”함.
- 가장 흔한 “불량” 의제: 기후변화(SDG 13), 해양·육상생태계(SDG 14 & 15)와 지속가능소비·생산(SDG 12)
- 한국은 10개 부문 “불량”, 2개 부문 “우량”, 기타 5개 부문 “취약”으로 평가됨. 종합평가 순위: 100점 만점에 66점으로 34개 OECD권 국가 중 제24위.

### 3) SDI Index에 의한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수준의 예시적 평가(SDSN)



출처: The SDG Index and Dashboard (UN SDSN,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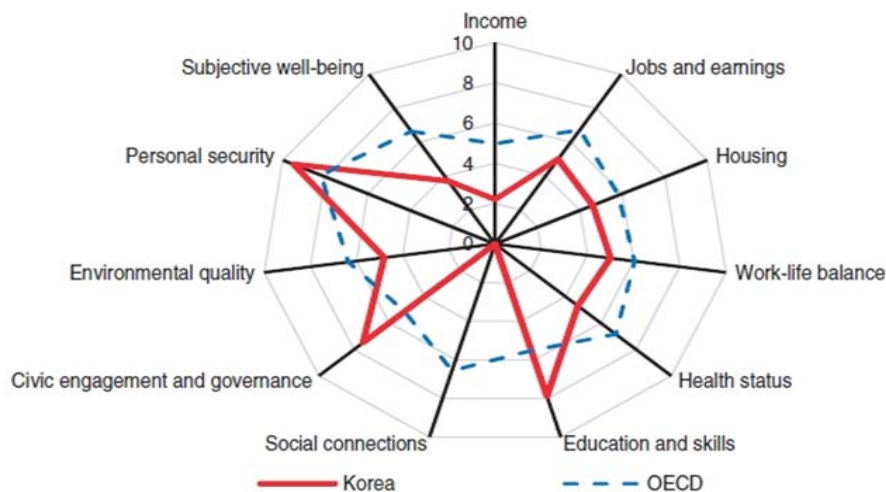
- 우량: SDG 9(지속가능 산업화), SDG 12(지속가능 소비·생산)
- 취약: SDG 1(빈곤퇴치), SDG 2(지속가능 농업), SDG 4(질적 교육), SDG 10(불평등), SDG 16(평화, 정의, 제도)
- 불량: SDG 3(건강, 웰빙), SDG 5(남녀평등), SDG 6(물), SDG 7(에너지), SDG 8(성장, 일자리), SDG 11(도시, 정주지), SDG 13(기후변화), SDG 14(해양생태계), SDG 15(육상생태계), SDG 17(글로벌 파트너십)

엄밀한 평가를 실시해 보면 한국은 전반적인 지속발전 준비태세에서 OECD내 최하위권 수준으로 나올 가능성 높음.

- “우량”으로 평가된 SDG 9(지속가능 산업화)의 경우 산업의 화석에너지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 미반영.
- “우량”으로 평가된 SDG 4(질적 교육)의 경우에도 ‘프로젝트 학습’, 인성교육 등 측면에서 한국교육의 질적 취약성이 제대로 반영 안 된 것으로 보임.

## 6. 웰빙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발전 현황

### 1) OECD 2016 BLI(Better Life Index)로 본 발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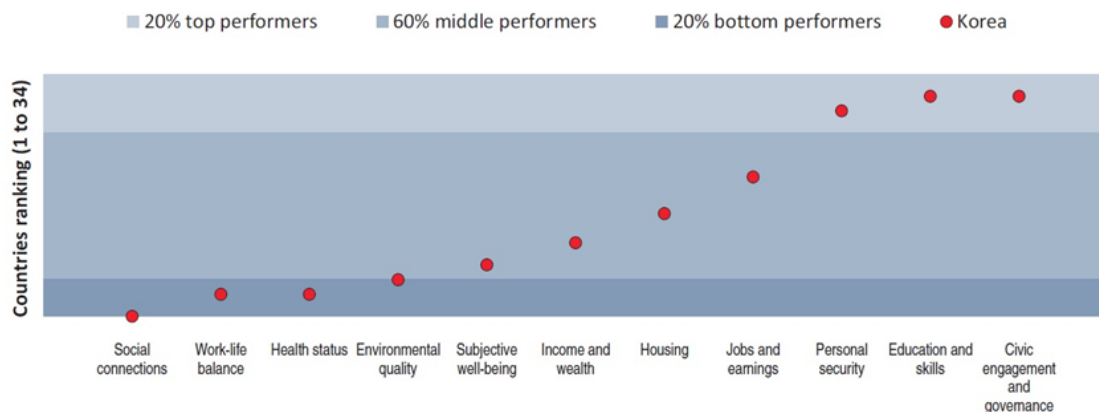


출처: Better Life Index (OECD, 2016)

## 2) OECD 2016 BLI로 본 발전 현황: 부문별 주요 요인

- 시민참여: 투표율 75.8% (17위), 규제개발 이해당사자 참여지수 2.4 (14위)
- 교육: 교육성취도 85% (15위), PISA 542점 (1위)
- 개인 안전: 밤길 걷기 안전감 67.7% (22위), 살인발생율 1.1 (21위), 양성평등 1.20 (19위)
- 소득과 부: 가구당 가용소득 \$19372 (24위), 사회적 불평등도 5.54 (23위)
- 일자리: 고용률 65.3% (23위), 양성평등 1.38 (32위), 사회적 평등 1.74 (15위)
- 주택: 개인당 방의 수 1.4 (24위), 기본시설 95.8% (27위)
- 주관적 웰빙: 5.8 (31위), 양성평등 1.14 (38위)
- 환경의 질: 대기오염 PM2.5 29.1  $\mu\text{g}/\text{m}^3$  (38위), 물의 질 만족도 77.6% (26위)
- 건강: 기대수명 81.8년 (12위), 건강 자기평가 35.1% (38위), 양성평등 1.23 (35위)
- 일-삶 균형: 장시간 근무 23.1% (36위), 여가시간 14.7시간 (27위), 양성평등 1.08 (37위)
- 사회적 연대감: 75.8% (37위), 양성평등 1.08 (37위), 사회적 평등 1.43 (14위)

## 3) OECD 2016 BLI로 본 한국의 발전 현황: 상대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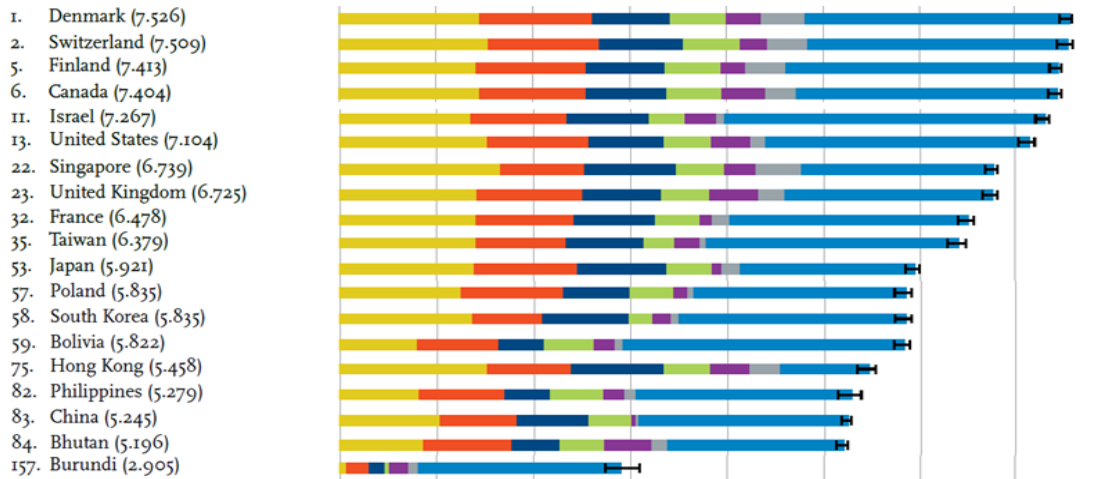
출처: Better Life Index (OECD, 2016)

- ‘시민참여’, ‘교육’, ‘개인안전’에서 ‘우량’ 평가. 과대평가일 듯.
- ‘일자리’, ‘주택’, ‘소득’, ‘주관적 웰빙’에서 ‘취약’ 평가.
- ‘환경의 질’, ‘일-삶 균형’ 및 ‘사회적 연대감’에서 ‘불량’ 평가.
- 종합평가: 38개 회원국 중 28위. 환경의 질과 경제와 사회 ‘취약’ 내지 ‘불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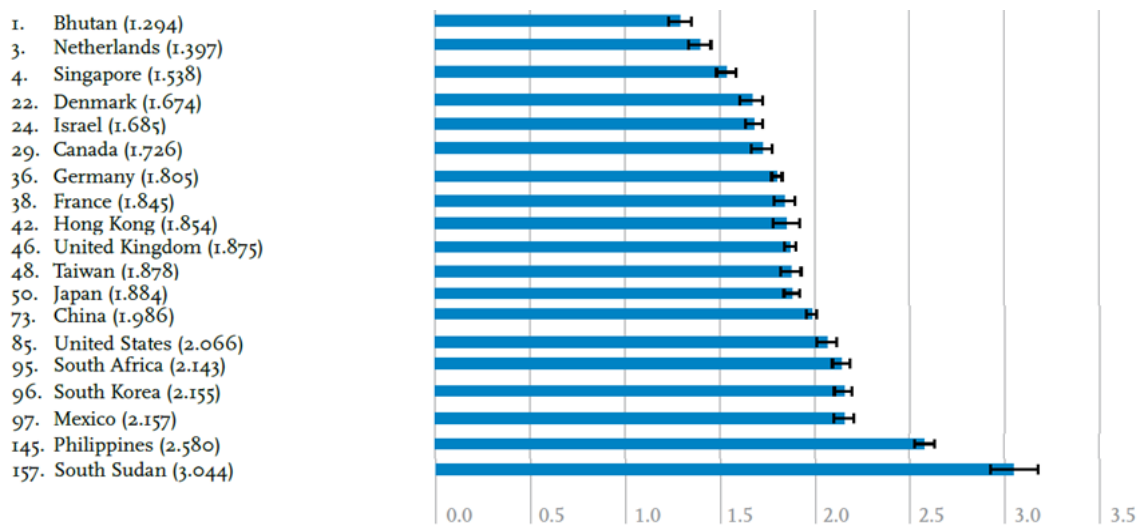
## 7. 국민의 '행복감'으로 본 한국의 발전 현황

### 1) SDSN '세계행복보고서'(WHR)(2016): 국가별 '행복'의 순위(2013~2015)



출처: World Happiness Report (UN SDSN,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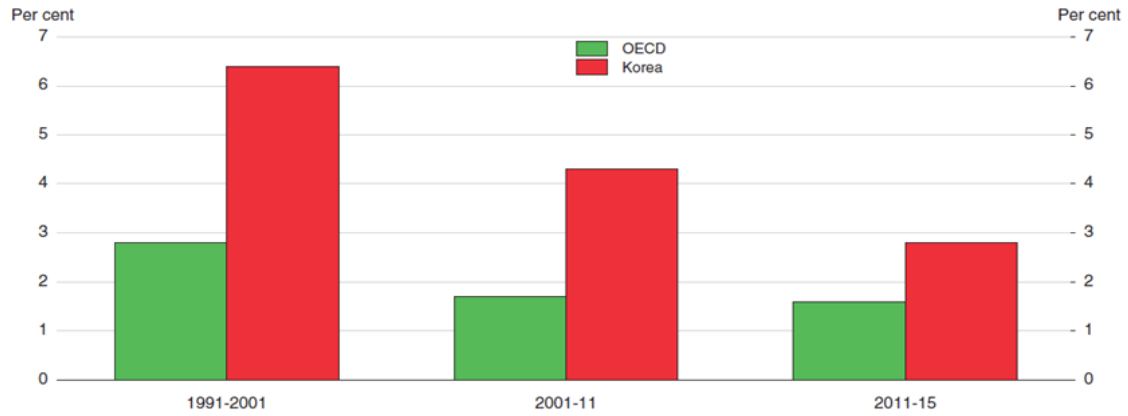
### 2) SDSN WHR(2016): 국민 행복의 불평등도 순위(2013~2015)



출처: World Happiness Report (UN SDSN,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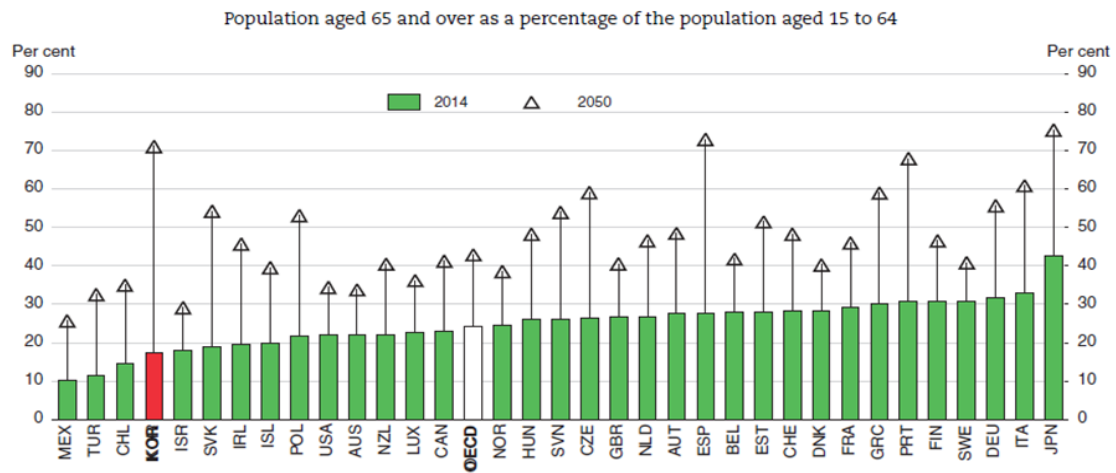
## 8. 한국의 중장기적 주요 발전 위협요인

### 1) 경제성장률의 지속적 하락세



출처: Economic Survey of Korea 2016 (OECD,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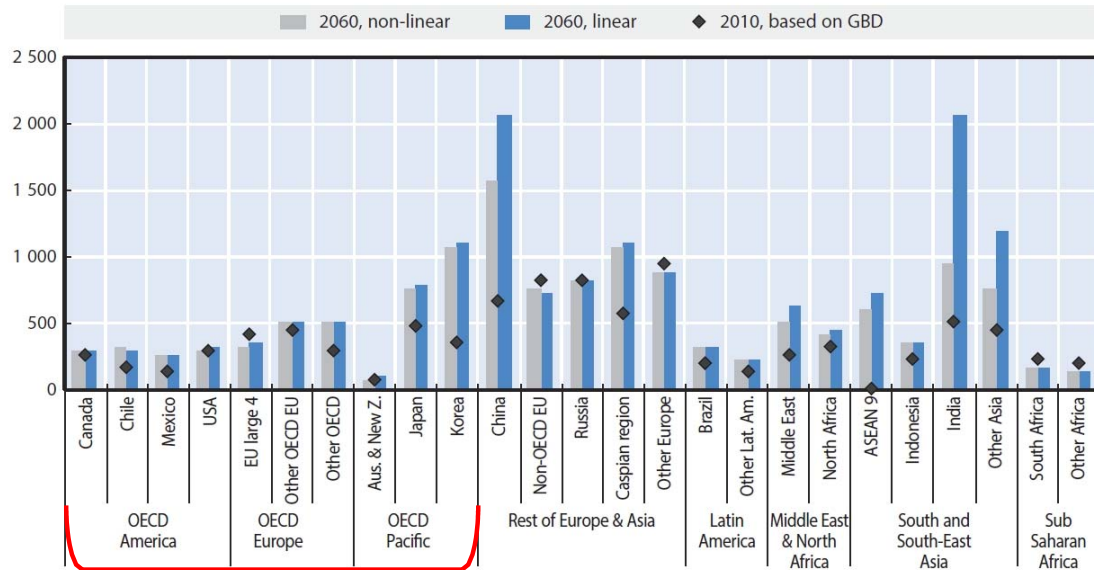
### 2) 인구 고령화 - OECD권 가장 빠른 속도



Source: OECD Demography and Population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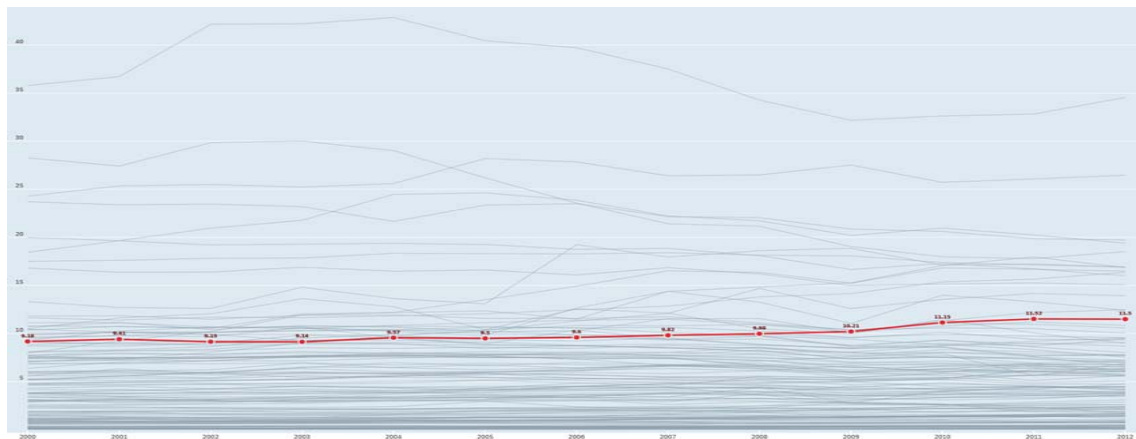
출처: Economic Survey of Korea 2016 (OECD, 2016)

### 3) “2016년 대기오염 사망률 OECD권 최고”



출처: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Outdoor Air Pollution (OECD, 2016)

### 4) 개인당 CO2 배출량: 비산유국 중 제4위 및 증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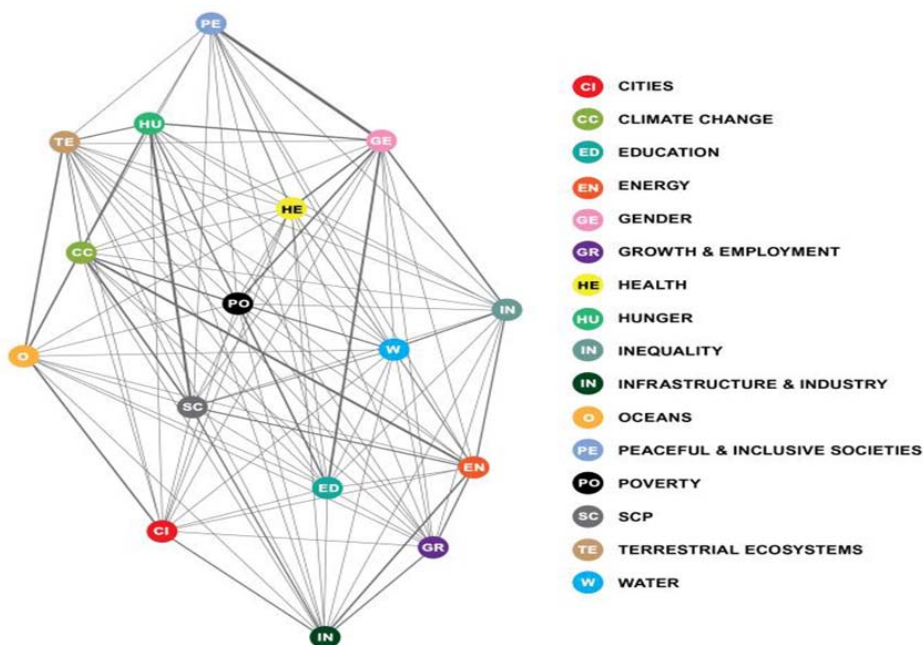
출처: OECD Database

### 5) 사회적 상향이동 사다리의 약화

- 계층이동에 있어서 성공의 기회가 현재 세대에 오면서 줄어들고 이러한 감소폭은 다른 국가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5-25, 여유진 외,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II - 사회통합과 사회이동')
- 학력의 대물림 현상 경향
  - ▷ 최근 세대(정보화 세대)로 올수록 고학력 아버지의 자녀가 고학력일 가능성 증가세
- 직업계층의 대물림 현상 경향
  - ▷ 관리전문직 아버지의 아들도 관리전문직일 가능성 높음
  - ▷ 단순노무직 아버지의 아들도 단순노무직일 가능성 높음

- 계층의 대물림 경향: 상층과 하층에서의 계층고착화 현상 매우 심각
  - ▷ 15개 무렵 하층이었을 경우 현재도 하층일 가능성, 15세 무렵 상층이었을 경우 현재도 상층일 가능성 상당
  - ▷ 정보화 세대의 경우 현재 본인의 계층이 아버지 세대의 계층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 상당
  - ▷ 부모의 낮은 학력, 사회계층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나올 확률은 연령대가 낮아 질수록 낮음
- 부모의 낮은 사회계층에도 불구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했던 학생들의 노동시장 지위와 근로 소득의 상대적 우위는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줄어들고 있음

## 9. 문제에 대한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 SDGs는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



출처: UN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15)

## 10. SDGs의 활용방안

### 1) 글로벌 사회와 국가와 지역사회의 관리도구(management tool)로 운용

- ‘What to do’의 점검목록(check-list)로 활용: 지속가능발전 전략의 수립 - 정책목표의 점검 및 조정
- 정책에 따른 성과(progress)의 성적표(score card)로 활용: 정부 등 행동책임자에 대한 책임성(accountability) 규명 수단
- 목표(goal) 및 세부목표(targets) 대비 진도 ‘지표(indicator)’ 설정 및 주기적 측정·분석

## 2) 글로벌 시민의식과 각계(各界) 위한 중장기 지표 제공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시민의식의 배양과 시민협력의 촉진 수단

복잡하게 상호 연결된 여러 중장기적 문제와 도전 및 대책에 관해 시민들 간 글로벌차원의 통합적 이해와 지속가능발전 시민의식을 촉진. 나아가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책임의식을 배양하고 시민협력을 촉진.

학계, 교육계, 기업과 각종 기관, 청년 등에게 중장기 지향 목표와 지침 제공.

- 자연·사회과학계의 연구의제 제시: 지속가능발전 문제들의 원인과 해법
- 미래세대 위한 각급 교육과정에 지속가능발전 문제와 과제 mainstream화 도구
- 기업 및 주요 기관들에게 주요 중장기 경영지표 제시.
- 학생 등 청년들에게 SDGs 시대가 요구하는 경력개발 방향 제시

## 11. SDGs 이행을 위한 과제: 모니터링 과정의 설정

- 향후 15년간 SDGs 이행에 대해 세 가지 수준에서 모니터링('follow-up and review')을 주기적으로 실시: 각국에 적합한 세부목표(targets) 및 지표들(indicators) 설정.
- 국가차원 모니터링: 각 정부가 자발적 추진. 지역 및 글로벌 모니터링의 기반.
  - ▷ 장기적 오리엔테이션, 성과/도전/갭 평가 → 성공·실패요인 및 새로운 문제 파악 → 정책의 선택·개선
  - ▷ 기존 정책협의 플랫폼 및 과정 최대 활용 → 국가 여건과 역량 및 필요성과 우선순위에 부응해 운용.
  - ▷ 개방적, 포용적, 참여적 절차: 모든 이에게 투명하고 모든 이해당사자에 의한 보고를 조장, 지원
- 지역차원 모니터링(UN ESCAP): 상호 동료학습 및 지역차원의 도전 파악과 대응전략 모색.
- 글로벌 모니터링: UN ECOSOC 운영 HLPF 주관으로 장관급 참석 모니터링 연례적 실시. 4년 주기로 UN총회 차원 정상급 모니터링 실시.
  - ▷ 국가별 보고 및 주제별(Thematic) 모니터링 실시: 경험의 공유, 정치적 리더십과 지도와 권고 제공. 총체적 일관성, 의제의 타당성 및 야심 북돋기.
  - ▷ 선진국과 개도국의 발전진도(progress)와 성취, 당면도전 및 새로운 과제를 파악.
  - ▷ 사무총장은 연차 SDG Progress Report 및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발간

## 12. SDGs 이행을 위한 과제: '지속가능발전전략'의 정립, 운영

- 국가 지속가능발전전략의 수립: 부문별 개혁과제, 혁신적 정책들과 투자계획 및 국제협력 과제들로 구성. 기존 정책과 전략의 점검, 개선, 활용.
- 국가전략에 병행해 지방정부는 지방 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
- SDGs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각 SDG의 2030년까지 이르는 세부지표와 이행전략 및 단기적 이행목표를 2030 세부목표로부터 '역산도출(backcasting)'하는 것 바람직함.
- SDG #13(기후변화행동): 기후변화 대응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비추어 파리협약 부응 이산

화탄소배출저감 전략[‘저탄소배출발전전략’(LEDS)] (혹은 ‘녹색성장전략’)의 조기 개발, 활용(backcasting)이 중요.

- ▷ 2070 탄소 순(純)제로화를 목표로 해서 2050년 배출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로부터 2050년까지의 에너지시스템 재편전략을 역산도출 → 온실가스배출 감축계획(NDC)의 점검, 평가 및 개선.

### 1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적 협치의 필요성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사회-환경의 세 측면을 조화시키고 통합하는 대책을 도출해야.

- 여러 부처, 기관들 및 이해당사자들 간 수직적·수평적 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협치(協治) 체계가 구축되어야 → 범정부적 이행추진기구, 범사회적 이행평가과정 참여체제 구축.
- SDGs의 이행을 위한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 및 이행 평가는 정부가 주도하되 그 과정을 모든 이행당사자들에게 개방해야.

중앙정부: SDGs 이행대책, 국가전략, 평가의 틀 수립, 연차 보고서 발간, 다자이해당사자 자문그룹의 운영. 시민들과 국제사회에 대해 책임성 수행

- 지방정부: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정책의 주요 시험대. 중앙정부와 지역시민사회 간 교량.

학계: 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들과 전문연구소가 계획 및 이행과정에서 주요 역할.

- 연구개발을 통해 신기술 창출, 전략적 우선순위와 베스트 프랙티스 파악.
- 1차 자료의 수집, 분석, 해석을 통해 의제 이행을 평가.
- 교육, 훈련 통해 차세대 지속가능발전 리더들 양성 및 공론화와 시민교육을 주도.
- 정부에 의한 SDG 이행계획 수립과 운영 지원.
- SDSN은 대학 등 지식기관의 이런 활동을 지원하도록 UN에 의해 출범되었음.

자연·사회과학계: 경제-사회-환경을 복잡하게 모두 아르는 지속가능발전 문제에 대한 다면적 통합적 분석과 해법 도출을 위해 과학기술적 및 경제사회적 분석 → Science-Policy Interface (SPI): 문제의 규정(definition)과 정책 도출에 기여 및 참여

시민사회: 계획·평가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낙오시키지 말자’ 차원에서 핵심적 역할 수행.

- ‘목소리’ 작은 공동체와 지방의 이익 대변.
- 가난한 계층과 약자들 지원 경험에 입각해 소외계층 지원 대책 개발, 제시를 주도.

기업: 정부의 협력 파트너로서 중요.

- 지속가능 생산 공정 개발, 자연자원의 재활용
- 노동자 사회보호의 개선, CSR 사업, 자선기부 등의 역할.
- SDG 의제에 입각 지속가능 경영 및 지역사회 친화적 경영으로 기업경쟁력 제고
- 정부는 기업의 SDG과정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를 설정해야.

국회 및 지방의회: SDGs 이행의 모니터링 참여, 지원.